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24.2.29.)
- ②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24.3.6.)
- ③ 장애인기업 고충'해결의 장(場)'마련 ('24.3.26.)
- ④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24.3.15.)
- ⑤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24.3.7.)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

- 국민권익위, 200여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대상 감사관회의 개최
- 공공부문 채용비리,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지방 토착형 부패 등 근절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 추진 사례도 공유

(‘24. 2. 2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2월 29일 개최했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들었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
- 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24. 3. 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 < '24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	지방의회			
	I (장관급)	II (차관급)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III (중점)	IV (지방 공사공단)		광역	기초		
				I (시)	II (군)	III (구)								I (시)	II (군)	III (구)
718	25	22	17	75	82	69	17	32	55	34	34	13	17	75	82	69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 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 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라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장애인기업 고충 ‘해결의 장(場)’ 마련

- 국민권익위, 오늘 오후 장애인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해외수출 지원 등 고충 건의…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해결안 논의
- 중장기 검토사항은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해 적극 처리 예정

(‘24. 3. 2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재)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매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경기도 첨단산단, 울산 마포산단, 전남 여수산단 등 12차례 현장을 찾아 총 144건의 기업 고충을 청취한 결과, ’ 24년 3월 26일 기준 84건을 수용(58.3%)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홍보 ▲해외수출 지원 확대 ▲기업 판로개척 ▲장애인기업 인증 제도 및 브랜드 운영 ▲조세지원 방안 등 장애인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6일 회의에서 나온 기업인의 고충은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창업 지원, 기업육성 등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24. 3. 15.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을 직접 만나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민원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하여 민원·신고 유형별, 사례별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 ☑ 공직자는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법 해석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해석상 쟁점,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 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우선하도록 규율하는 실효적인 사전 부패관리 장치” 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끌어올린다

- 국민권익위, 이달 7일부터 청렴도 저조기관 24곳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23년도 청렴컨설팅 실시 기관 중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12곳 멘토로 나서 반부패 시책 노하우 등 전수

(‘24. 3. 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과 추진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은 7일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국민권익위-멘토·멘티기관-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자문회의 ▲그룹별 자유회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 청렴컨설팅 내용 및 진행절차 】

- **(반부패역량 진단)** 기관별 반부패 업무계획, 종합청렴도 결과,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청렴도 저조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자문회의)** 국민권익위, 멘토·멘티기관, 반부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회의를 통해 추진된 시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유회의, 워크숍)**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추진기반, 반부패 시책 추진 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많은 기관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이 향상되고 공공분야 전반에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